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특성 분석

이소영^a · 이민수^b · 김진진^{c*}

^a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 조교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b한국농수산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c한국농수산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1515)

Characteristics of Farming Settlement for Young Farmers

So-Young Lee^a · Min-Soo Lee^b · Jin-Jin Kim^c

^a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verg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Korea

^b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Korea

^c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settlement in young farmer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each characteristic on young farmers' intention for settling into farming, an ordered logit model was employed. As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ir intention for settling into farming, age and the highest education level showed a positive effect, while family-run farming had a negative effect, which wa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farm incom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and policy characteristics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Key words: young farmers, farming settlement, ordered logit model

1. 서론

최근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농촌으로 진입하려는 청년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농산업발전 정책, 생활 공간으로써의 농촌지역 소멸 방지 및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 민간기관(농협 등), 교육기관(한국농수산대학, 일반대학 영농특성화과정 등), 연구기관(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등에서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지원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고 있다. 그

러나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에 대한 실제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수행, 이상훈, 김정호, & 박정지, 2018).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중 청년농업인에 해당하는 2040세대(20, 30, 40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구성비는 각각 5.0%, 4.4%, 7.1%이다. 실제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1995년 25만7000명에서 10년이 경과한 2015년 1만40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2020년에는 1만28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전국 3만7000여 개의 농촌마을의 축소나 소멸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례로 전국 3,553개 읍면동 중에서 1,791개(50.4%)가 지역소멸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지역소멸의 범위와

주요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순서형 로짓모형

* 교신저자(김진진) 전화: 063-238-9316, e-mail: kji0khk@af.ac.kr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혜영, 2021).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과 현실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각종 육성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될 때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강혜정, 2017),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부분이 아직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정진철, 202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농정착 성공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영농정착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규모변화 및 영농매출액으로 파악하기도 하고(나승일 et al., 2004), 소득 및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측정하기도 한다(서병준, 1991; 유창열, 1982).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영농정착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조영철, & 김성수, 1987).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져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청년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김기홍, 2016), 후계농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미래의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한 연구(김정호, 강정일, 김경덕, 정영환, & 최은아, 2015; 이소영 et al., 2016)가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육성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새로운 지원제도 발굴에 대한 내용은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수립은 혜택을 받은 농업인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책을 입안한다.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이 농업인의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책 수혜를 받은 귀농인들의 가구소득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특이 농업소득을 계측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전익수, 2019).

이에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농정착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영농정착 요인을 유형화하였다. 이후 유형화된 영농정착의 어떤 요인이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영농정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각각의 요인이 영농정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영농정착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영농정착

정착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어느 장소나 지위 등에 있어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리잡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일에 정착한다는 것은 해당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정착의 개념은 변화된다. 인류학에 의하면 인류정착은 농업의 시작과 함께 발전했는데, 인류의 정착에 있어서 농업의 기여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이외의 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착의 도구는 더 이상 농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농정착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방식과 생활수단에 있어서 농업과의 강한 연관성을 갖을 때 영농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복근채, 1999). 따라서 영농정착은 농업을 생활수단 즉, 직업으로 삼고 농업과 연관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영농정착에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인의 개인적 특성 및 역량에 따라 영농정착과정이 다를 수 있다. Beard(1948)는 영농정착과정을 농업사다리(Agricultural Ladder) 개념을 이용해 6단계로 설명하였다. Beard(1948)에 의하면 영농정착의 최종목표는 개별 농업인이 자기농장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농정착의 1단계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집에서 인건비 유무에 상관없이 부모의 일을 돕는 과정으로, 청소년기부터 농업활동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농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단계, 3단계는 다른 농장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소작경영단계이다. 4단계는 농기업의 성격을 띠는 법인체의 경영체를 공동경영하는 단계, 5단계는 농업단체에 고용되어 농장을 경영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6단계는 농업인이 자기농지 및 농장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영농정착의 범위는 청소년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에 의해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농사일을

돕는과정부터 성인에 이르러서는 자가소유의 농장을 경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영농정착과정은 영농정착과 관련된 의사결정단계로 파악하기도 한다. 복근채(1999)는 영농정착단계를 영농탐색, 영농준비, 영농정착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영농을 하기 위해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관심, 적성 등을 탐색하는 영농탐색단계,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영농준비단계, 작목을 입식하고 농장을 경영하는 영농정착단계이다. 따라서 영농정착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영농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영농수행여부를 결정하는 탐색단계와 영농수행 준비단계를 거친 후 부분적인 작목 재배부터 완전한 농장경영을 포함하는 영농정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영대(1981)는 영농정착을 농장경영의 책임정도로 개념화하였다. 책임은 농장경영의 부분적인 것부터 전반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농장경영의 책임은 단순 기술 및 시설관리인으로서의 농장관리인에게 부여된 것만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장을 운영하며 농장 전체에 관한 경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영농정착은 농업경영체나 법인체에 피고용인으로 소속되어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행위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영농정착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영농정착은 경제활동의 수단인 직업으로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영농정착의 범위는 특정경영체에 소속되어 피고용인으로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거나 입차하여 농업경영체를 경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2.2.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역량, 부모의 영농활동여부 및 관심, 농업소득, 직업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네트워크, 농업정책활용 경험 등으로 구분된다(Corsi, 2017; May, Arancibia, Behrendt, & Adams, 2019; Šimpachová Pechrová, Šimpach, Medonos, Spěšná, & Delín, 2018; Zagata, & Sutherland, 2015; 나승일 et al., 2004; 마상진, 2011; 마상진, & 김강호, 2010; 복근채, 1999; 유창열, 1982; 이영대, 1981; 조영철, & 김성수, 1987).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농정착 요인은 크게 개인적특성, 경제적특성, 사회적특성, 정책적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농업인으로서 갖추어 할 역량 및 농업활동과 연관된 가정환경 등이 해당된다. 우선 영농에 대한 적성, 농업에 대한 태도, 성장지역, 농업경험유무, 부모의 영농정착에 대한

지지도 및 호응도 등은 영농정착에 영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ARABATZIS, & AGGELOPOULOS, 2010; 박수진, 채혜성, & 황대용, 2019; 이영대, 1981). 영농활동에 대한 개인의 관심정도는 청소년기부터 노출된 농업환경 및 부모의 영농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향후 젊은 층의 영농유입과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친다(복근채, 1999; 조영철, & 김성수, 1987; 황정임, 최윤지, & 윤민혜, 2014). 이와 함께 성인인 경우는 현재 자신이 보유한 생산기술능력 및 자본조달능력 등 개인의 역량과 자산상태가 영농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마상진, 2011).

경제적 특성은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소득 창출과 관련된 요소이다. 경제적 특성요인은 영농정착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영농활동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Carbone, & Subioli, 2011; Dries, & Ciaian, 2012; 나승일 et al., 2004; 서병준, 1991; 유창열, 1982;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영농활동의 지속여부는 농업생산을 통한 경제적 성과, 농촌생활의 만족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전업여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유창열(1982)은 영농정착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타 산업의 변화에 주목하여 타 직종으로 진출하려는 유형과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있으면서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농활동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즉, 농업인은 영농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과 달성여부에 따라 농업활동을 겸업과 전업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목표한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여 영농정착에 성공한 농업인은 해당 분야의 규모화를 통해 이윤창출을 추구하고자 하며, 상대적으로 영농정착에 있어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농업인은 농업종사와 함께 농외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타 산업에 종사하는 전략을 추구한다(Klovaité, 2016; 김종인, & 김정섭, 2016).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토지, 자본)의 규모에 따라 영농규모를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산기반이 약한 청년농업인은 소규모로 영농을 시작하거나 혹은 영농진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마상진, 2011). 청년농업인은 농업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영농규모에 따라 농업소득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유창열, 1982). 따라서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특성은 겸업여부, 농업소득, 영농규모, 자산규모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영농정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조영철, & 김성수, 1987).

사회적 특성은 영농활동과 관련된 사회적관계나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작목반과 같은 생산자 및 사회조직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ARABATZIS, & AGGELOPOULOS, 2010; 정성지, 2020). 특히 청년농업인은 농업에 새롭게 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4H나 자생적 모임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나 공공기관 종사자와의 공적인 관계를 통해 농업정책사업 정보를 공유받고 활용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관계는 청년농업인이 영농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하며 농업에 정착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특성은 영농기반을 확보하거나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의 개발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Hamilton, Bosworth, & Ruto, 2015; 마상진, & 김강호, 2010; 박수진 et al., 2019).

정책적 특성은 영농정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사업의 참여 및 수혜정도를 의미한다. 청년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따른 어려움을 내적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즉, 청년농업인은 영농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정책을 통해 영농진입 및 규모확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Schimmenti, Borsellino, Ferreri, Di Gesaro, & D'Acquisto, 2014; 마상진 et al., 2017).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기반시설 지원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조영철, & 김성수, 1987). 특히 사회적 및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농업인은 낮은 생산기술에 따른 충분한 농업소득 확보 실패로 영농정착에 실패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진입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책지원 분야는 크게 후계농업인 육성, 농지지원 및 경영실습입대사업, 경영컨설팅 사업, 정착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198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54,757명을 선정하여 4,063,742 백만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따른 영농정착율은 92.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1980년대부터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중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오해섭, & 김정주, 2002). 그러나 정예농업인력육성과 관련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편중되어 도시청년 등 새로운 신규 청년농의 영농정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은영, 2014).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농업인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40세미만으로 정의되므로 일부 연구는 40대 미만을 청년농업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 사업 중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기준을 적용하여 청년농업인을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7주간 진행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109부(72.7%)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 변인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위의 절에서 논의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영농정착 영향 요인을 개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 정책적 특성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차원인 개인적 특성은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수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은 크게 일반적인 개인적 특성과 영농경험 관련 특성으로 구분된다. 이들 2가지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Schimmenti et al.(2014), 나승일 et al.(2004), 마상진, & 김강호(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번째 차원인 경제적 특성의 경우는 Dries, & Ciaian(2012), 나승일 et al.(2004), 서병준(199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농업생산을 통한 경제적 성과 정도를 핵심적인 경제적 특성으로 고려하고 있다. 세번째 차원인 사회적 특성의 경우는 Hamilton, Bosworth, & Ruto(2015), 박수진 et al.(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영농활동과 관련된 사회적관계 정도를 핵심적인 사회적 특성으로 고려하고 있다. 네번째 차원인 정책적 특성의 경우는 Schimmenti et al.(2014), 마상진 et al.(2017), 조영철, & 김성수(198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정책사업의 참여 및 수혜 정도를 핵심적인 정책적 특성으로 고려하고 있다.

개발된 예비문항은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

단(농업경제학 박사 3명)에 의한 검증 실시하였다.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명확하지 않은 문헌은 수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측정 항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3.3.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위로지트분석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순위로지트분석은 종속변수가 서열척도 일 때 사용되는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의 영농정착 의향 변수는 ‘없음(1)’, ‘보통(2)’, ‘있음(3)’으로 측정하였다.

순위로지트분석모형은 잠재변수 y^* 가 점차 높은 임계치들을 통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형성된 순위를 모형화한다(Gujarati, 2010). 본 연구모형에서 y^* 는 영농정착 의향에 대한 관측되지 않는 척도이다. 응답자 k 에 대한 순서화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관계를 가정하면 식(1)과 같다.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quad \dots \text{ (식 1)}$$

ε 는 평균이 0인 대칭분포이며,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는 $F(\varepsilon)$ 를 가정한다. 설명변수 x 가 절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정규화가 이루어진다(Gujarati, 2010).

y^* 의 값이 매우 낮은 것은 영농정착 의향이 없음을 의미하고, $y^* > \alpha_1$ 인 경우는 영농정착 의향은 보통인 상태로 향상된다. $y^* > \alpha_2$ 는 영농정착 의향이 있는 상태로 향상되며,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 = 1 & \text{ if } y^* \leq \mu_1 (= 0) \\ y = 2 & \text{ if } \mu_1 < y^* \leq \mu_2 \quad \dots \text{ (식 2)} \\ y = 3 & \text{ if } \mu_2 < y^* \end{aligned}$$

(식 2)에서 μ_1 과 μ_2 는 y^* 의 경계값(Threshold)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3개의 관찰 가능한 응답들에 대해 특정 값($j = 1, 2, 3$)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μ_j 는 다양한 값들이 추정될 수 있지만, 회귀분석이 가능하도록 $\mu_1 = 0$ 으로 정규화한다(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 윤성도, 2005).

응답자 i 가 j 를 선택할 확률은 (식 3)과 같다(이성우 et al., 2005).

$$\begin{aligned} Prob(y = j) &= Prob(\mu_{j-1} < y^*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leq \mu_j) \\ &= Prob(\mu_{j-1} - \sum_{k=1}^K \beta_k x_k < \varepsilon < \mu_j - \sum_{k=1}^K \beta_k x_k) \\ &= F(\mu_j - \sum_{k=1}^K \beta_k x_k) - F(\mu_{j-1} - \sum_{k=1}^K \beta_k x_k) \quad \dots \text{ (식 3)} \end{aligned}$$

(식 3)에서 누적분포함수는 로짓함수이므로, 누적확률은 (식 4)와 같다(이성우 et al., 2005).

$$Prob(y \leq j) = Prob(y^* \leq \mu_j) = \frac{e^{\mu_j - \sum_{k=1}^K \beta_k x_k}}{1 + e^{\mu_j - \sum_{k=1}^K \beta_k x_k}} \quad \dots \text{ (식 4)}$$

누적로지트분포함수를 $L(\cdot)$ 로 나타내면, 청년농업인 i 가 영농정착 의향 j 를 선택할 확률은 (식 5)와 같다(우재영, 2009; 이성우 et al., 2005).

$$\begin{aligned} Prob(y = 1) &= L(\mu_1 - \sum_{k=1}^K \beta_k x_k) = L(-\sum_{k=1}^K \beta_k x_k) (\because \mu_1 = 0) \\ Prob(y = 2) &= L(\mu_2 - \sum_{k=1}^K \beta_k x_k) - L(-\sum_{k=1}^K \beta_k x_k) \\ Prob(y = 3) &= L(\mu_3 - \sum_{k=1}^K \beta_k x_k) - L(\mu_2 - \sum_{k=1}^K \beta_k x_k) \quad \dots \text{ (식 5)} \\ &\vdots \\ Prob(y = J) &= 1 - L(\mu_{J-1} - \sum_{k=1}^K \beta_k x_k) (\because P(y \leq J) = 1) \end{aligned}$$

설명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확률의 변화인 한계효과

<표 1> 측정 항목 및 참고 자료

구분	문항 개요	참고 자료
개인적 특성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농업활동 경험 특성	Schimmenti et al.(2014), 나승일 et al.(2004),
	- 연령, 교육수준, 농학계 고등학교 졸업여부, 농기출신, 승계농 여부	마상진 & 김강호(2010)
경제적 특성	농업생산 통한 경제적 성과 정도 - 농업소득을 통한 생활가능 여부	Dries & Ciaian(2012), 나승일 et al.(2004), 서병준(1991)
사회적 특성	영농활동 관련 사회적관계 정도 - 지역조합 가입 여부	Hamilton, Bosworth, & Ruto(2015), 박수진 et al.(2019)
정책적 특성	정책사업 참여·수혜 정도 - 정책자금 활용 경험 여부	Schimmenti et al.(2014), 마상진 et al.(2017), 조영철 & 김성수(1987)

(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다(이성우 et al., 2005).

$$\frac{\partial \text{Prob}(y=j)}{\partial x_k} = \left[\frac{\exp(\mu_{j-1} - \sum_{k=1}^K \beta_k x_k)}{(1 + \exp(\mu_{j-1} - \sum_{k=1}^K \beta_k x_k))^2} - \frac{\exp(\mu_j - \sum_{k=1}^K \beta_k x_k)}{(1 + \exp(\mu_j - \sum_{k=1}^K \beta_k x_k))^2} \right] \beta_k \quad \dots \text{(식 6)}$$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는 남성의 비중(84.4%)이 높았으며, 연령은 30대(50.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 30대 연령비중이 높아(82.6%), 상대적으로 미혼의 비중(60.6%)이 높았으며, 무자녀의 비중(67.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특성으로는 부모세대 혹은 조부모세대가 농업인인 농가 출신(74.3%)의 응답자가 많았으며, 경영유형으로는 승계농(39.4%)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창업농(30.3%)과 가족경영(30.3%)의 비중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은 채소(20.2%), 축산(19.3%), 과수(18.3%), 식량(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기간은 4년 미만(38.5%), 10년 이상(21.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영농지역은 전라(49.5%), 경상(35.8%), 경기(9.2), 충청(2.8%), 강원(1.8%), 제주(0.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영농정책과 정부정책활용 정도

영농정책과 정부정책활용 정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정부정책 활용여부를 조사하였다(표 3). 응답자들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총 7개의 정부정책사업 중 ‘청년후계농 영농정책 지원사업(69.7%)’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51.4%)’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

<표 3> 영농정책 관련정책 활용 여부

구분	빈도(%)	
	예	아니오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책 지원사업	76(69.7)	33(30.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56(51.4)	53(48.6)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3(11.9)	96(88.1)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9(8.3)	100(91.7)
경영실습임대농장	7(6.4)	102(93.6)
농업경영 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20(18.3)	89(81.7)
신규농업인(귀농·귀촌)정책지원사업	11(10.1)	98(89.9)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N=109)		빈도(%)	구분(N=109)		빈도(%)
성별	남	92(84.4)	생산품목	식량	19(17.4)
	여	17(15.6)		채소	22(20.2)
연령	20대	35(32.1)		과수	20(18.3)
	30대	55(50.5)		특용	13(11.9)
	40대	19(17.4)		화훼·조경	8(7.3)
결혼여부	기혼	43(39.4)		축산	21(19.3)
	미혼	66(60.6)		기타	6(5.5)
자녀유무	있음	36(33.0)	영농기간	4년 미만	42(38.5)
	없음	73(67.0)		4년 이상 7년 미만	22(20.2)
농가출신여부	농가출신	81(74.3)		7년 이상 10년 미만	22(20.2)
	비농가출신	26(23.9)		10년 이상	23(21.1)
	조부모만 농가출신	2(1.8)	지역	강원	2(1.8)
	경영유형	승계농(영농승계)		43(39.4)	경기
창업농		33(30.3)		경상	39(35.8)
가족경영(가족과 협업경영)		33(30.3)		전라	54(49.5)
				충청	3(2.8)
				제주	1(0.9)

경영 컨설팅 사업(18.3%)’,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11.9%)’,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10.1%)’, ‘농지지원사업(8.3%)’, ‘경영임대실습농장(6.4%)’ 순으로 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농업인은 우선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통해 경영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토지나 시설 등의 기반미련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기출신여부에 따른 영농정착 관련정책 활용여부를 파악한 결과(표 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69.7%)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82.1%)은 농기출신의 청년농업인이 비농가

출신이나 조부모 농기출신의 청년농업인보다 활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해당 정책사업은 농업기반여부에 따라 지원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농기출신의 청년농업인의 선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이나 신규농업인(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은 비농기출신의 활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해당 정책의 활용비중은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나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유형에 따른 영농정착 관련정책 활용여부에 있어서도 농업기반여부에 따라 활용정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5).

〈표 4〉 농기출신여부에 따른 영농정착 관련정책 활용

구분	농기출신여부(빈도, %)			합계
	농기출신(N=81)	비농기출신(N=26)	조부모 농기출신(N=2)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53 (69.7)	21 (27.6)	2 (2.6)	76 (100.0)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46 (82.1)	8 (14.3)	2 (3.6)	56 (100.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5 (38.5)	7 (53.8)	1 (7.7)	13 (100.0)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5 (55.6)	3 (33.3)	1 (11.1)	9 (100.0)
경영실습임대농장	2 (28.6)	4 (57.1)	1 (14.3)	7 (100.0)
농업경영 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13 (65.0)	6 (30.0)	1 (5.0)	20 (100.0)
신규농업인(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3 (27.3)	7 (63.6)	1 (9.1)	11 (100.0)

〈표 5〉 경영유형에 따른 영농정착 관련정책 활용

구분	경영유형(빈도, %)			합계
	승계농(N=43)	창업농(N=33)	가족경영(N=33)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28 (36.8)	28 (36.8)	20 (26.3)	76 (100.0)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28 (50.0)	13 (23.2)	15 (26.8)	56 (100.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15.4)	7 (53.8)	4 (30.8)	13 (100.0)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3 (33.3)	5 (55.6)	1 (11.1)	9 (100.0)
경영실습임대농장	1 (14.3)	5 (71.4)	1 (14.3)	7 (100.0)
농업경영 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9 (45.0)	9 (45.0)	2 (10.0)	20 (100.0)
신규농업인(귀농·귀촌)정착지원 사업	2 (18.2)	8 (72.7)	1 (9.1)	11 (100.0)

1)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독립경영’이어야 한다.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각 사업별로 독립경영의 인정 기간이 상이한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경영 예정자 이거나 3년 이하인 자’(농림축산식품부, 2020),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독립경영 10년 이하인 자’의 영농경력을 의미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승계농(36.8%)과 창업농(36.8)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승계농(50.0%)의 사용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경영실습임대농장 및 신규농업인(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등은 창업농의 비중이 높았다. 창업농은 승계농이나 가족경영에 비해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초적인 주택, 농지지원 및 임대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의 영농정착 의향이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집단별로 영농정착 의향의 차이는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를 보면(표 6), 우선, 경영유형에 있어서 가족경영, 창업농, 승계농 순으로 영농정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집단에 비해 가족경영의 영농정착 의향이 높은 이유는 부모 혹은 가족과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승계농의 영농정착 의향이 타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승계농에 있어서 부모와의 갈등(김진모, 주대진, 길대환, & 황영훈, 2011)이 농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출신여부에 있어서는 비농가출신, 농가출신, 조부모 농가출신 순으로 영농정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출신의 영농정착 의향이 높은 이유는 농업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3.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사용될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7>과 같다.

본 연구는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위회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표 8>과 같다. <표 8>의 모형 1~모형 4는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분석을 달리하였다. 모형 1은 ‘개인적 특성’, 모형 2는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특성’, 모형 3은 ‘개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 모형 4는 모형 3에 ‘정책적 특성’을 추가하였다.

모형1~모형4까지 영농정착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가 거의 동일하므로, 모형 4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승계농’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

<표 6> 경영유형 및 농가출신여부에 따른 영농정착 의향

구분	경영유형	평균(표준편차)	F-value
경영유형	승계농(N=43)	2.70(0.091)	1.140
	창업농(N=33)	2.85(0.077)	
	가족경영(N=33)	2.85(0.077)	
농가출신여부	농가출신(N=81)	2.79(0.058)	0.330
	비농가출신(N=26)	2.81(0.096)	
	조부모 농가출신(N=2)	2.50(0.500)	

주 : *** p < 0.01, ** p < 0.05, * p<0.1

<표 7> 기초통계량 및 변수 정의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수	농업 종사 의향 (없음=1, 보통=2, 있음=3)	2.79(0.049)	1	3
	연령(세)	33.04(6.235)	23	49
	교육수준(년)	15.39(1.414)	12	20
개인적특성	농학계열 졸업여부 (예=1, 아니오=0)	0.72(0.448)	0	1
	농가출신여부 (예=1, 아니오=0)	0.76(0.428)	0	1
	승계농 여부 (예=1, 아니오=0)	0.39(0.490)	0	1
설명변수	농업종사기간(년)	5.92(4.357)	0	20
	경제적특성	농업소득만으로 생활가능여부 (예=1, 아니오=0)	0.56(0.499)	0
사회적특성	지역조합가입여부 (예=1, 아니오=0)	0.68(0.465)	0	1
정책적특성	정책자금활용경험여부 (예=1, 아니오=0)	0.90(0.289)	0	1

수록 영농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만, ‘승계농’은 창업농이나 가족농에 비해 영농정착의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농업소득만으로 생활가능’할수록 영농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영농정착에 긍정적인 결과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변수인 ‘지역조합 가입여부’와 정책적 특성변수인 ‘청년농업인 정책활용 경험여부’는 영농정착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이 현재 조직되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청

년농업인 정책 활용경험여부가 농업소득이나 영농정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효과를 가지적으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의 모형 4의 추정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바탕으로 한계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농정착의향 있음’ 즉, ‘prob(y=3)’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1.4%,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계농’인 경우에는 ‘영농정착의향 보통’ 즉, prob(y=2)를 선택할 확률은 7.9%이지만, ‘영농정착의향 있음’을 선택할 확률

<표 8>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추정치 (Z-value)	계수추정치 (Z-value)	계수추정치 (Z-value)	계수추정치 (Z-value)	
개인적 특성	연령	0.161 (1.97)**	0.163 (1.96)**	0.176 (2.06)**	0.145 (2.05)**
	교육수준	0.547 (2.01)**	0.550 (2.04)**	0.543 (2.01)**	0.542 (2.01)**
	농학계열 졸업여부	-0.862 (-0.85)	-0.915 (-0.87)	-0.891 (-0.84)	-0.883 (-0.84)
	농가출신여부	0.667 (0.85)	0.590 (0.73)	0.651 (0.79)	0.652 (0.79)
	승계농여부	-0.852 (-1.43)	-1.219 (-1.85)*	-1.245 (-1.89)*	-1.267 (-1.87)*
	농업종사기간	-0.462 (-1.35)	-0.509 (-1.45)	-0.493 (-1.40)	-0.493 (-1.41)
경제적 특성	농업소득으로 생활가능여부		1.465 (2.33)**	1.464 (2.23)**	
사회적 특성	지역조합가입여부		-0.524 (-0.80)	-0.527 (-0.80)	
정책적 특성	청년농업인 정책 활용경험 여부			-0.125 (-0.10)	
	LR Chi ²	15.28**	20.94***	21.59***	21.60***
	Log L	-51.84	-49.01	-48.68	-48.68
	Pseudo R ²	0.13	0.18	0.18	-0.18

주 : *** p<0.01, ** p<0.05, * p<0.1

<표 9> 한계효과 분석 결과

구분	prob(y=1)	prob(y=2)	prob(y=3)	
개인적 특성	연령	-0.003	-0.011	0.014
	교육수준	-	-0.034	0.044
	농학계열 졸업여부	-	-	-
	농가출신여부	-	-	-
	승계농여부	-	0.079	-0.102
	농업종사기간	-	-	-
경제적 특성	농업소득으로 생활가능여부	-0.027	-0.091	0.118
사회적 특성	지역조합가입여부	-	-	-
정책적 특성	청년농업인 정책 활용경험 여부	-	-	-

주 :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한계효과만을 나타냈음.

은 -10.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응답자일수록 ‘영농정책의향 있음(prob(y=3))을 선택할 확률이 11.8%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연령’, ‘교육수준’, ‘농업소득’ 변수의 변화에 따라 ‘영농중사의향 있음’, 즉 ‘prob(y=3)’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지만, ‘승계농’일수록 ‘영농정책의향 있음’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승계농의 영농정책의향을 향상시킬 제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농가인구 및 농가당 경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농가수 100만 호 붕괴가 예상되는 등 고령화, 출산을 저하 등으로 인한 농촌 및 지역공동체의 소멸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가수, 농가인구의 감소추세 속에서 정부의 각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인구 중 청년농업인에 해당하는 2040세대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정책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원적, 심층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년농업인 육성대책을 수립(김정호, 강정일, 김경덕, 정영환, & 최은아, 2015; 임소영 et al., 2016)하거나 청년농업인 육성체계의 개선방안(마상진, 정은미, & 김정인, 2017)을 제시하는 등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정책적으로 검토(김기홍, 2016)하는 규범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청년농업인의 양적인 확대 및 정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농정착 개념 및 영농정착 특성을 파악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순위회로분석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승계농여부’이고, 경제적 특성에서는 ‘농업소득’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영농정책의향 있음’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1.4%,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할수록 ‘영농정책의향 있음’을 선택할 확률은 1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계농’일수록 ‘영농정책의향 있음’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10.2%)하는 것으로 나타나, 승계농이 영농정책에 있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 특성의 농업소득은 기존의 선행연구(Carbone, & Subioli, 2011; Dries, & Ciaian, 2012; 나승일 et al., 2004; 서병준, 1991; 유창열, 1982; 정용경, 황정임, 최은지, & 최정신, 2019)에서와 같이 영농정책의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 특성과 정책적 특성을 측정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의 사회적네트워크 수준이 활성화되지 않고, 정책수혜를 통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지원정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및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의 분야가 생산요소인 ‘농업인’, ‘농지’,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경영유형 및 농가출신 여부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조사결과 및 영향요인 등은 다양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영농정책 지원제도의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의 특성을 파악하고, 영농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영농정착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된 설명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변수의 대리변수이므로, 일부 변수들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둘째,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표본이 청년농업인 전체를 대표할 대표본은 아니므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특성을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셋째, 자료조사의 한계로 청년농업인 정책지원사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제도의 전개 상황, 주요 지원사업, 문제점 및 한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정량적인 효과측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기존 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강혜정. (2017). 청년농업인·후계인력 육성방안.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23-39.
2. 김기흥. (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추진방향*. 공주: 충남연구원.
3. 김정호, 강정일, 김경덕, 정영환, & 최은아. (2015).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서울: (사)환경농업연구원. (연구보고 R30).
4. 김종인, & 김정섭. (2016).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3(2), 115-122. <https://doi.org/10.12653/jecd.2016.23.2.000115>
5. 김진모, 주대진, 길대환, & 황영훈. (2011).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영농정착률 제고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3), 49-72.
6. 나승일, 이용환, 김진모, 강경종, 김중우, 마상진, et al. (2004).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영농정착 실태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4), 1-19. <https://doi.org/10.23840/agehrd.2011.43.3.49>
7.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8. 마상진. (2011). 농촌활력화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한국농산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93-110.
9. 마상진, & 김강호. (2010). 신규 취농 진입장에 요인과 영농 성과의 구조적 관계. *농촌경제* 33(4), 1-18.
10. 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 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807).
11. 박수진, 채혜성, & 황대용. (2019). 농업교육 참여자의 인식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6(4), 205-219. <https://doi.org/10.12653/jecd.2019.26.4.0205>
12. 복근채. (1999). 농업인후계자의 성공적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서병준. (1991). 농민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13, 39-59.
14. 오해섭, & 김정주. (2002).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 청소년교육 및 지원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2), 185-197.
15. 우재영. (2009).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농협의 선호도 분석: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2), 405-438.
16. 유창열. (1982). 영농정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14(1), 49-54.
17. 이성우, 민성희, 박지영, & 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 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18. 이수행, 이상훈, 김정호, & 박정지. (2018). *경기도 청년 농부 육성 지원방안 정책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19. 이영대. (1981).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이은영. (2014). 농촌활력소와 잠재농업인 육성: 학교4H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1. 임소영, 김정섭, 이실, 김관수, 유도일, & 이병훈. (2016).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인력육성사업군 심층평가*.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22. 전익수. (2019). 정부 정책이 귀농인 가구소득에 미친 효과 분석. *농촌경제* 42(1), 103-135. <https://doi.org/10.36464/jrd.2019.42.1.005>
23. 정성지. (2020).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 탐색. *농촌지도와 개발* 27(2), 89-110. <http://doi.org/10.12653/jecd.2020.27.2.0089>
24. 정용경, 황정입, 최윤지, & 최정신. (2019).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특성과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6(3), 143-151. <https://doi.org/10.12653/jecd.2019.26.3.0143>
25. 정진철. (2020). 농식품산업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토론편). *한국농산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79-80.
26. 조영철, & 김성수. (1987). 농어민 후계자의 영농정착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2), 13-23.
27. 하혜영. (202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제1844호).
28. 황정입, 최윤지, & 윤민혜. (2014). 외국의 농가 경영이양 지원 제도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21(4), 939-965. <http://dx.doi.org/10.12653/jecd.2014.21.4.0939>
29. Arabatzis, G., & Aggelopoulos, S. (2010). European uni on young farmers program: A Greek case study. *New Medit: Mediterranean Journal of Economic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Revue Méditerranéenne D'Economie Agriculture et Environnement*, 9(2), 50-55. https://newmedit.iamb.it/share/img_new_medit_articoli/301_50aggelopoulos.pdf
30. Beard, W. P. (1948). *Starting to Farm*. Danville, IL: Interstate.
31. Carbone, A., & Subioli, G. (2011). *The generation turnover in agriculture: The ageing dynamics and the eu support policies to young farmers*.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fter the Fischler reform: National implementations, impact assessment and the agenda for future reforms, p. 375.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509051>

32. Corsi, A. (2017). Succession decisions in family farms and public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In *public policy in agriculture: Impact on labor supply and household income* (pp. 337-356). London, United Kingdom: Routledge.
33. Dries, L., & Ciaian, P. (2012).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EU agriculture. *Food Policy*, 37(6), 600-608. <https://doi.org/10.1016/j.foodpol.2012.07.007>
34. Gujarati, D. (2010). *Econometrics by example*. London, United Kingdom: Palgrave Macmillan.
35. Hamilton, W., Bosworth, G., & Ruto, E. (2015). Entrepreneurial younger farmers and the 'young farmer problem' in Eng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61(4), 61-69. <https://doi.org/10.17707/AgricultForest.61.4.05>
36. Klovaitė, M. (2016). *The employment of the European Union structural funds for the settlement of young farmers: The cases of lithuanian and polish regions*. Šiauliai, Lithuania: Šiaulių Universitetas.
37. May, D., Arancibia, S., Behrendt, K., & Adams, J. (2019). Preventing young farmers from leaving the farm: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young farmer payment using a behavioural approach. *Land Use Policy*, 82, 317-327. <https://doi.org/10.1016/j.landusepol.2018.12.019>
38. Schimmenti, E., Borsellino, V., Ferreri, A., Di Gesaro, M., & D'Acquisto, M. (2014).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in sicily to support young farmers. *Itali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69(1), 31-42. <https://doi.org/10.13128/REA-16306>
39. Šimpachová Pechrová, M., Šimpach, O., Medonos, T., Spěšná, D., & Delín, M. (2018). What are the motivation and barriers of young farmers to enter the sector? *AGRIS On-Line Papers in Economics and Informatics*, 10(4), 79-87. <https://doi.org/10.7160/aol.2018.100409>
40. Zagata, L., & Sutherland, L.-A. (2015). Deconstructing the 'young farmer problem in Europe': Towards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Rural Studies*, 38, 39-51. <https://doi.org/10.1016/j.jrurstud.2015.01.003>

Received 02 June 2022; Revised 15 June 2022; Accepted 22 June 2022



Dr. So-Young Le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verg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focus on young farmer and agricultural management.

Address: (54874),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verg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1515, Kongjipatji-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E-mail: lsy2000@af.ac.kr
phone: 82-63-238-9315



Dr. Min-Soo Le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focus on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regional policy.

Address: (54874),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1515, Kongjipatji-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E-mail: mins000.lee@gmail.com
phone: 82-63-238-9310



Dr. Jin-Jin Kim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are focus on young farmer and business plan.

Address: (54874), Department of Liber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1515, Kongjipatji-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E-mail : kjj0khhk@af.ac.kr
phone : 82-63-238-9316